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립 방안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립 방안

연구진

김윤승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성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I 서론

1. 연구 배경	04
2. 연구 목적	05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6

II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및 기능	07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09

III 주민참여예산제도 국내외 사례

1. 주민참여예산제도 국내외 사례	14
2. 시사점	29

IV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및 적정성 분석

1.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30
2. 주민참여예산 적정성 분석	40
3. 주민참여예산 추진 절차의 적정성	48

V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

1.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	55
-------------------------	----

 참고문헌	64
--	----

I

서론

1. 연구 배경

-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주민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되어 왔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분권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을 제고 하기 위해 도입됨
 -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 의무화된 이후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에서는 주민참여의 범위가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 전반 으로 확대됨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3년 참여예산제도 도입 이후 2022년 현재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예산 규모에 있어 비약적 증가를 이루었음
 - 2013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함
 - 2016년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예산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7년 증가 추세로 돌아선 후 2019년 이후 대폭 확대되었음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 건수는 286건이었으며 사업비는 401억 원임

- 인천광역시의 시민참여예산의 사업 수와 사업규모에 대해 성과(현황)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민선 7기 출범 이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으로 주민참여 범위 확대, 참여예산 위원회 확대, 지원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짐
 - 최근 3년간(2019~2021) 사업 수와 예산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음
 - 이러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적·지속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 현황(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 목적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제시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최근 3~5년 사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를 확인하고자 함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이 변화하였는데 변화된 유형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
 - 2018년 이후 사업 수와 예산이 확대되었는 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함
 - 추가로, 2022년 인천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주민참여예산의 유형, 규모, 절차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에 대한 파악을 실시한 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타 광역시와의 비교,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전문가 토론을 실시함
 -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운영방식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향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최근 운영 현황 파악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확인 가능
 - 타시도 등 국내사례와 국외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 모형 정립, 주민참여예산 절차별 개선 방안 모색으로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질적 향상 도모

II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및 기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및 의의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심사·확정하는 제도를 의미함(임성일·서정섭, 2015; 서정섭·이장욱, 2018)
 - 국내 논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 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라고 정의됨(곽채기, 2003; 서정섭·이장욱, 2018 재인용, p.12)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 주도로 결정되던 예산의 일부분을 지역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 또는 주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더라도 예산 편성 및 운영과정에 주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임성일 외, 2008)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사업 선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책 담당자가 파악하지 못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주민 중심의 정책 입안을 통해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주민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의 일방적 의사전달이 아닌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시민 상호 간 소통 및 공적 숙의과정을 중요시함
- 2006년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 주민참여제도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개정법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설치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음
 - 동 법 제39조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밖에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위해 주민 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 되어 기존의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 평가 영역까지 확대되었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 기능은 의사소통, 예산 활동의 투명성, 분권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등이라고 할 수 있음(서정섭·이장욱, 2018)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시민 간 대화와 협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며 이를 통해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전과정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이를 통해 주민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함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을 예산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지위가 아닌 지방자치의 주요 공적 의사결정과 운영에 적극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함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 주민의 의사에 기반하여 재정을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함(이미애, 2018)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 선행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델의 유형을 구분하여 왔는데 이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선택한 유형이 주민참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추진 방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유형별로 운영방식 및 운영방안의 주안점이 달라지기 때문임
- 서정섭 외(2017)의 분석에 따르면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델 유형화의 기준으로서 ① 주민참여 대상의 범위와 ② 주민참여의 수준을 제시하였음
- 이 밖에도 나중식(2004)은 예산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사전달은 어떤 방향(하향식 vs 상향식 등)으로 이루어지는지, 참여도구는 어떠한지를 추가적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① 정부주도적 예산참여형, ② 관·민협의적 예산참여형, ③ 시민주도적 예산참여형으로 구분한 바 있음
- 박광우(2006)는 전술한 기본적인 기준에 ‘제도의 의미와 성격¹⁾’을 추가적 기준으로 활용하여 ① 민관협치형, ② 민관협의형, ③ 관주도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구분했는데, 이 때 ①을 ‘실질적 참여예산제도’로, ③을 ‘형식적 참여예산제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윤태환(2010)도 유사한 기준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① 형식적 운영모형, ② 제안-수용적 운영모형, ③ 협의적 운영모형으로 구분하였는데, ①번 유형의 경우 제도가 운영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참여가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고 설명

1) 참여예산이 형식 수준의 운용에 그치는지 아니면 실질적 성과로 귀결되는지에 대한 구분 기준

- 광채기(2011)는 전술한 기존 유형 구분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이 의무화되기 ‘전’ 구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한 규정 그대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형식적 수준에서의 제도’로 분류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주민참여 대상 범위와 주민참여 수준뿐 아니라, ‘제도화 수준’, ‘예산편성권 공유수준’, ‘주민참여조직 유무’ 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유형 구분 방식을 제시함(아래 [표 2-1] 참조)

표 2-1 | 광채기(2011)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델 유형 구분

구분	의견수렴형	주민협의형	민관협의형	주민주도형
주민참여 수준	• 정보제공과 이를 통한 설득	• 협의와 협력	• 협동과 권한위임	• (주민에 의한) 통제
예산편성권 공유수준	• 관료중심적 의사결정	• 주민협의를 통한 관료적 의사결정	• 민·관 공동의사결정	• 주민중심적 의사결정
주민참여과정의 주도자	• 관료	• 관료+주민참여조직	• 주민참여조직	• 주민참여조직
주민참여권의 제도화	• 제도화	• 제도화	• 제도화	• 제도화
주민참여조직	• 없음	• 제도화(단일조직) • 소극적·제한된 역할부여	• 제도화(단원적 조직) • 적극적·제한된 역할부여	• 제도화(다원적 조직) • 적극적·포괄적 역할부여
참여범위와 대상	• 예산편성 작업 시작 전 단계 • 일반회계	• 예산편성의 일부 과정 • 일반회계	• 예산편성의 모든 과정 • 통합재정	• 예산편성의 모든 과정 • 일반회계
의사소통방식	• 상향적 • 일회적	• 수직적 • 쌍방향 제한적	• 수직적·수평적 • 쌍방향 반복적	• 수직적·수평적 • 쌍방향 반복적
주민참여방식	•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 설문조사, 사업공모, 토론회, 주민참여조직	• 설문조사, 사업공모, 토론회, 주민참여조직	• 설문조사, 사업공모, 토론회, 주민참여조직

자료 : 광채기, 2011; 서정섭 외, 2017: 25 재인용

-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제 제도의 주된 운영 주체나 의사소통 방식 등을 통해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음
- 우선, 의견수렴형은 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제도가 운영되나, 실제로 주민 참여예산제도는 관료(공공조직)에 의해 주도되고 시민들은 관료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설득 당하는 주체’에 불과함
- 반면 주민협의형은 관료가 의사결정의 주된 주체가 되는 것은 의견수렴형과 동일하나, 주민협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다음으로, 민관협치형과 주민주도형에서는 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나 민관협치형에서는 다원적 주민참여조직과 관료가 ‘협동’하는 것이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는 반면, 주민 주도형에서는 주민참여조직이 전 과정을 주도한다는 차이를 보임
- 각 유형은 주로 사용되는 ‘도구’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관료에 의한 정보전달이 주된 도구가 되는 의견수렴형에서는 공청회나 설문조사, 기본적인 사업공모 등이 주된 참여 방식이 됨
 - 반면, 주민들과의 협의나 그들의 참여, 또는 주도가 핵심적인 다른 유형에서는 토론회, 주민참여조직 운영 등이 중요한 방식임
- 한편, 서정섭 외(2017: 102)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구분 하였음
 - 우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였는데 이는 주민참여가 적합한 사업의 범위와 참여방식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소규모 민원사업의 경우 기초단체에 적합하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광역 단체에 적합한 것이 일반적임
 - 다음으로, 도시-농촌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지리적 여건에 따라 인구구조가 달라 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는 지를 달리하게 만들 수 있음(서정섭 외, 2017: 102)

표 2-2 | 서정섭 외(2017)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델 유형 구분 및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구분	운영 방식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도시형 광역단체	• 기초단체와의 역할 분담 •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 단위의 지원 노력 병행	•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광역단체의 공모사업은 광역 단위 사업이 주를 이뤄야 하나, 특정 지역의 숙원사업이 주로 신청. 따라서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 • (기초자치단체 지원)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예산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음
도시형 기초단체	• 읍면동 주민대표기구 및 주민자치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 (주민대표기구 및 주민자치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회의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읍면동 주민대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활용 가능. 또한 주민자치사업을 읍면동 단위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모델 역시 가능
도농역 광역단체	• 광역단위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방법 모색 • 기초단체에서의 제도 활성화 위한 광역 단위의 지원 노력 병행	• (광역단위 주요사업에 대한 다양한 참여방식 마련) 광역단위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비하기때, 사업 규모별로 적절한 주민참여방식 설계 필요 • (기초자치단체 지원) 도농형 광역단체 유형의 경우 직접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보다 기초단체를 간접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음
도농형 기초단체	• 주민의 참여가 어려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참여 방식	•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참여 방식 모색) 도농형 기초단체의 경우 주민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찾아가는 현장투표' 등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도입이 필요

자료 : 서정섭 외(2017: 104-6)의 내용을 요약 및 재정리

- 선행연구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을 구분했을 뿐 아니라, 각 유형 별로 운영을 위해 어떤 점에 주안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위 [표 2-2] 참조)
 - 이러한 선행연구들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적합한 제도 운영 방식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대상인 인천광역시의 경우 도시형 광역단체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어서 제시된 운영방식과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사업공모를 통해 광역단위에서 수행 가능한 주민참여예산 유형 정립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동시에 기초단체와의 역할 분담 및 지원방식에 대한 정립이 요구됨

III

주민참여예산제도 국내외 사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 남부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에서 최초로 도입·실시된 이후 전세계 여러 도시로 전파되어 운영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가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공급 또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 실패 현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한 주민의 불신 및 불만에 의해 등장하기 시작하였음(서정섭·이장욱, 2018)
 - 주민참여예산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투명성과 지방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미,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도입되어 활성화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를 유형, 규모, 절차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국내 사례로서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주민예산제도 우수사례 중 하나인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살펴보았음
 - 국외 사례로서 2014년 이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시 사례를 살펴보았음
- 이후 다음 장에서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광역시의 사례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1. 주민참여예산제도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선 6기가 들어선 2015년부터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본격화되었음
 - 대구광역시는 2011년에 「지방재정법」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규정에 의해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음 (대구광역시, 2019, 23)
 - 2015년 이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민관협력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 대상 맞춤형 예산교육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하고 예산에 반영하기 시작하였음
- 이후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기관 선정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단체로 선정됨
 -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확장하여 2015년 57억 원이던 예산규모가 2022년 190억 원으로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사업내용도 다양해지는 등 질적으로도 성장하여 왔음
 - 대구광역시는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원협의회 운영, 시민투표실시,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음
 - 2021년에는 청년서포터즈단 신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개모집 확대 및 사회적 약자 위촉 확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실시간 쌍방향 교육 및 화상회의시스템, 청각 장애인 접근 가능 온라인 콘텐츠, 빅데이터 분석 등을 시도하였음

주민참여예산 유형

- 2022년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은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구군참여형, 읍면동참여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유형은 2020년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지역회의형으로 구성되었으나 사업명 이해의 어려움, 청년참여 강화 등의 이유로 사업유형이 개편되어 2021년부터 4가지 유형으로 개편되었음
 - 2022년의 경우 청년참여 강화를 위해 청년분과 한도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있음

표 3-1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유형 및 사업규모(2022년)

구분		사업 규모	사업 내용
합계		190억 원	
광역시	시정참여형	90억 원	• 광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혹은 2개 이상 구·군의 시민 편익 사업 • 일반사업(3억 원 이하) 행사 프로그램사업(5천만 원 이하)
	청년참여형	20억 원	• 청년 일자리, 창업, 교육, 창작활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지원 • 일반사업(3억 원 이하) 행사 프로그램사업(5천만 원 이하)
구·군	구군참여형 (8개)	40억 원 (각 5억 원)	• 구·군 소관사무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 일반사업(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행사 프로그램사업(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읍면동	읍면동참여형 (142개)	40억 원 (각 28백만 원)	•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 한도액 제한 없음

출처 : 대구광역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 개선 및 운영계획(p.11)

- 시정참여형의 경우 시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적격 사업으로 판단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투표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며 2022년 9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 청년참여형은 청년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유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청년분과 위원회 주도로 사업을 심사하여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되며 2022년 사업규모는 20억임

- 구군참여형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소규모 생활밀착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업선정 자율권을 부여하고 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읍면동참여형 사업은 대구광역시 142개 읍·면·동의 풀뿌리 주민참여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사업규모는 2022년 40억 원임

주민참여예산 예산규모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규모는 2018년 130억 원에서 2022년 190억 원으로 양적규모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증가하던 예산편성액의 경우 2019년 이후 그 증가액 및 증가율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예산편성액이 전년 대비 1억여 원(전년 대비 0.6%) 감소하였다가 2022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섬
 - 다만, 이러한 감소는 외부 환경(코로나-19 등)의 충격으로 인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상적 운영 어려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예산 규모의 증가는 공모 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된 사업건수의 증가(2021년 제외)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업측면에서 다양화되고 있으며 예산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2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 및 사업건수 현황(최근 5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목표액(억)	130	140	150	180	190
예산편성(억)	130	138	149	148	178
증가액(억)	35	8	11	-1	30
증가율(%)	36.8	6.1	7.9	-0.6	20.2
사업건수	325	378	443	398	562

출처 : 대구광역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 개선 및 운영계획(p.1)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

주민참여예산 절차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예산편성 절차는 유형별로 세부 절차에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주민제안을 통한 사업공모, 부서분류 및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사업선정(총회 및 투표), 예산편성 단계로 진행됨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각 유형에서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공개 모집함
 - 주민에 의해 공모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법령 및 조례에 타당한지, 사업에 실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시 또는 구·군에 속하는 사무인지를 검토하여 적격사업을 선정하고 구·군사업의 경우 구·군참여형 사업으로 이관함
 -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참고하고 필요 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최종 적격사업을 선정함
 - 본심사에서는 제안자의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참여예산위원과, 제안자, 사업부서 사이에 숙의·토론을 거쳐 평가지표에 따른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분과별 한도액 기준 130% 범위 내 고득점 사업 순으로 총회 선정사업을 선정함
 - 총회에서는 최종 예산 반영사업 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70%, 일반 시민 30%의 반영비율로 최종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며 예산안에 반영하여 시의회에 제출함
 - 다만, 읍면동참여형 사업의 경우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공모 실시 및 총회에서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사업선정 결과를 시에 제출하면 구·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됨(읍·면·동 → 구·군 → 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및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예산아카데미, 주민참여예산사업모니터링단, 공감포럼, 청년서포터즈 등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2장에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7기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100명으로 공모를 통해 88명, 추천으로 선발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함
 - 공모 방식은 일반 시민 중에 성별과 연령대별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전자추첨을 통해 선발함
 -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위원회 내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임기는 1년이며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이 간사를 담당함
 -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가능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시장이 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등의 역할 수행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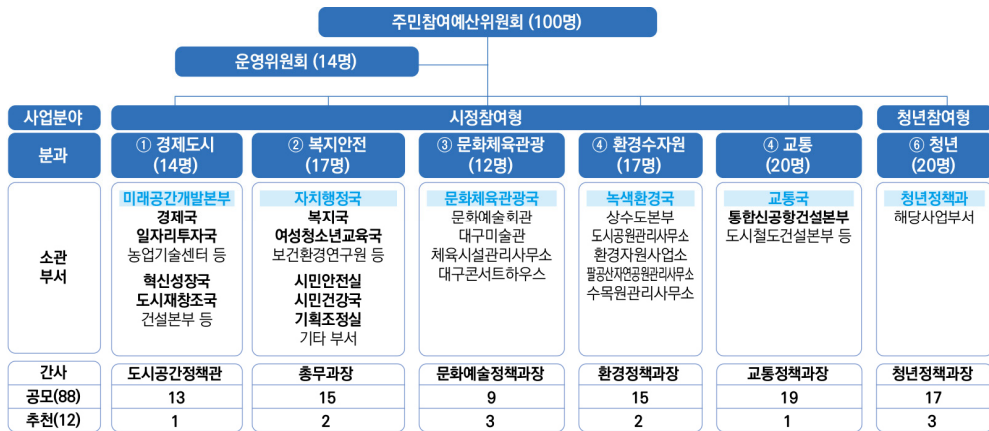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에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제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분과위원회)**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6개의 분과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며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임
 - 분과위원회의 설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6조에 기반하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위원들이 사업심사 건수와 청년참여 등을 고려하여 6개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 분과위원회는 경제도시, 복지안전, 문화체육관광, 환경수자원, 교통, 청년 분과로 구성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투표로 선출되며 간사는 주관부서 주무과장이 담당하고 있음
-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의견을 제출하며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사업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현장방문·사업모니터링 기능도 수행함
- **(운영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4명의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 운영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됨
 -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련된 사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그림 3-1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출처 : 대구광역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 개선 및 운영계획(p.11)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제시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조례 제20조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지원, 사업 공모 및 투표 시 홍보 지원, 총회 및 성과평가 토론회 등 주요 행사를 지원하고 있음
- 협의회는 협의회장(당연직) 및 12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팀장이 간사로 참여함
- **(예산아카데미)**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및 과정별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조례 제21조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에 대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과 관련된 예산실무,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교육 기본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일반시민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기본교육, 심화교육, 읍면동 참여형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과정,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서 작성법(이상 상시교육)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 12개 이상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사이버 예산아카데미를 확대하여 상시교육의 경우 이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제공함
- **(공감포럼)** 대구광역시는 제안사업 중 채택되지 않은 우수한 시민 아이디어를 사장 시키지 않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감포럼을 운영하고 있음
 - 공감포럼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포함한 주민제안사업 중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 일반 재정예산 사업으로 사업화하고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운영됨
 - 소관 사업부서 공무원의 1차 실무검토를 거쳐 전문가, 참여예산위원, 공무원이 참여한 공감포럼을 개최하여 제안자의 제안취지 및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청취 후 포럼 참여자 간 토론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 결정함

- (청년서포터즈) 대구광역시청 청년들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청년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임
 - 대구 및 경북 소재 대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단을 구성하고 주민참여 예산 회의 및 행사 참여, 홍보 콘텐츠 제작, 청년참여형 사업 발굴 및 제안, 제도 개선 제안 등을 유도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에 대해 활동비, 원고료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실적 등록 및 수료증을 부여하며 우수 활동 단위에 대해 성과평가토론회 시 감사장을 수여함

그림 3-2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출처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jumin.daegu.go.kr/jumin/main/mainPage.do>)

2) 국외 사례 - 프랑스 파리시²⁾

- 파리시의 참여예산제도와 같은 경우, 예산 규모나 사업의 범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성 등에서 특수성을 지니며 특히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참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됨(서정섭·이장욱, 2018: 43)
 - 파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사례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프랑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주주의 쇠퇴와 행정에 대한 불신에 의해 등장하게 되었으며 주민 직접 참여를 통해 공공영역에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방식 중의 하나임
 - 최근 프랑스는 지속적인 투표율 감소와 정치적 양극화, 기존 정치·행정 엘리트 층에 대한 대중의 반감 등 많은 서구 선진국과 비슷한 민주주의의 쇠퇴 문제를 경험해 왔음
 - 특히, 프랑스에서는 공공조직이 지닌 능력이나 그들의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어 왔음
 - 이러한 측면에서 강조된 것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의 운용으로 정치적·정책적 의사결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의 공공영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 것
- 지역 민주주의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 lademocratie de proximite)의 통과와 정치적 지도자의 관심 그리고 다양한 주민참여통로의 활성화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기여함
 - 프랑스의 전통적 행정은 중앙집권적이며 하향적(top-down)이라는 특징을 지님
 -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2002년 지역 민주주의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 lademocratie de proximite)이 통과됨

2) Participeida 홈페이지(<https://participedia.net/case/5008>)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함

- 이러한 법률은 시민에게 청원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80,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 중인 자치구역에서 지역 정책에 대한 토론을 장려하는 협의체(Conseil de Quartiers)를 설립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기반을 마련 되었음
- 이후 프랑스 전 지역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확산되어 갔는데, 파리에서는 2014년 시장 선거에서 사회당의 Anne Hidalgo가 당선되면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기 시작함
- Hidalgo 당선 전에도 이웃 협의회(Conseil des quartiers), 파리 청년협의회(Conseil Parisien de la Jeunesse), 파리 학생회(Etudiant de Paris-le Consei)와 같은 참여 기관들이 있었지만, 당선 이후 아래와 같은 많은 참여 통로들이 형성 및 활성화됨
-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구 중 하나였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제도 초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용되었으나 투표를 위해 참여한 유권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그 규모가 증가해 왔음

표 3-3 | 2014년 이후 형성된 파리의 주민 참여 기구

숙의 포럼 (Deliberative Forum)	• 미래세대협의회: 노동조합, 공무원, 무작위로 선발된 주민들로 구성. 그들이 경제·사회·환경 현안에 대한 토론과 토의를 진행 • 시민위원회: 저소득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숙의 공간 • 녹투르네 위원회(Norcturne Council): 야간 시간 동안의 안보, 교통, 문화, 상업에 초점을 맞추어 숙의 진행
교육 기회	• 지역 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기기(digital tools), 대중 연설 및 도시 운영 방식에 대한 무료 강좌 제공
도시 개발 참여	• 2014년 이후 파리는 시민들이 지역 개발과 관련된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방식을 마련함. 이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포함됨 1) I engage: 시민들의 위치, 흥미, 가용성(availableities)에 따라 그들을 관련된 NGO와 연계하는 app 2) Fix my street: 시민들이 지역 내 시설 관련 문제(교장 등)를 시에 알릴 수 있는 시민 신고 앱. 요구 진행 상황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도 있음 3) Dear Mayor, I have an idea: 파리 시민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이를 시장실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app. 해당 app은 이후 참여 예산 제도에서도 활용됨 4) Participatory Budget: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시 투자자금 배정 결정을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출처 : Participeida 홈페이지(<https://participedia.net/case/5008>)

주민참여예산 특징

- 파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연령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파리 거주자 모두에게 개방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자문을 실시함
 -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제안에 대한 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인 정보 - 이름과 성, 주소, 생년월일 등 - 만을 제공하면 됨
 - 프로젝트 제안서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프랑스의 ‘참여예산 현장’에 따르면 공공조직은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프로젝트 제안이나 투표 단계에서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 프랑스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위원(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특징을 보여줌(류영아, 2019: 29)
- 또한 예산참여위원회(commission)와 협의회(conseil de Paris) 등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자문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웃 협의회 및 지역단체, 시민 간 소통을 중시한다는 특징을 보임(류영아, 2019: 29-30)
- 기존연구(서정섭·이장욱, 2018: 45)는 파리의 예산참여제도 특징을 ① 강한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는 제도 운영, ② 시민들의 높은 호응 수준, ③ 적절한 행정지원 제공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음

주민참여예산 유형 및 예산규모

- 2022년 파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은 주로 광역시 프로젝트와 구 단위 프로젝트로 구분됨³⁾

3) 파리지 홈페이지(https://budgetparticipatif.paris.fr/bp/jsp/site/Portal.jsp?page_id=11, 접속일: 2022년 7월 15일)

- 광역시 프로젝트(Tout Paris projects)는 시 전체에 관련되는 사무(시소관사무)에 해당하며 파리 전체 시민이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구단위 프로젝트(Borough projects)는 특정 자치구의 거주민에 의해 제안되는 지역화된 사업에 해당함
- 주민참여예산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은 파리의 정책사업 중에 기존의 관행을 바꿀 혁신적인 사업(예: 학교 내 공기 질 센서 설치 정책)과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부지출 사업(예: 운동장 리노베이션 사업) 등을 포함함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범 운영 기간에 해당하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참여 예산은 전체 시 예산(2,000만 유로)의 5%에 불과했고, 수상 프로젝트는 1,800만 유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
 - 2015년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총규모는 총 1천 770만 유로(6개 사업)로서 주민참여예산액은 자본예산의 약 1.2%에 그침(황소하 외, 2015)
 - 2015년 실행된 사업은 쓰레기 재활용 기계 설치지원 사업부터 아마추어 예술가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며 사업별 예산 규모는 최소 100만유로부터 최대 370만 유로였음
- 하지만 2016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1억 유로를 배정하기 시작하였음
 - 2016년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파리시 주민참여예산액으로 3천 7백만 유로, 지역구 주민참여예산으로 3천 8백만 유로, 이 밖의 다른 유형의 주민참여예산에 나머지 예산이 배정되었음
 - 일반적으로 파리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은 광역시 사업에 30%가량이 배분되며 시와 함께 자치구 및 동 단위에서 수행되는 사업에는 70%가량이 배분됨
- 자금은 비대칭적으로 할당되며, 3,000만 유로는 저소득층 지역에, 1,000만 유로는 학교 프로젝트(학생 주도 주민참여제도)에 전용함

주민참여예산 절차

- 프랑스 파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절차는 사업제안, 사업분석, 사업선정 투표의 3단계로 이루어짐(민현정, 2018)
- **(사업제안: 1~2월)** 사업제안은 주로 1월부터 2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안할 수 있으나 사업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파리시민들은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파리시는 이러한 제안 사업을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함
 - 이러한 과정은 1월부터 2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제안 사업은 ① 삶의 질, ② 교통 및 이동, ③ 환경, ④ 문화, ⑤ 교육 및 청소년, ⑥ 스포츠, ⑦ 연대, ⑧ 청결, ⑨ 보안, ⑩ 지능형 도시 및 신기술, ⑪ 시민참여, ⑫ 경제 및 고용, ⑬ 주택, ⑭ 기타라는 14개 주제에 해당해야 함
 -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은 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② 파리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며, ③ 실현 가능해야 함
 -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민 투표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함
 - ▷ 허용 가능성(admissible): 프로젝트가 위 3개 기준을 충족할 것
 - ▷ 견고성(robust): 프로젝트는 분명한 목표 및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가진, 구체적 용어로 기술되어야 함
 - ▷ 실현 가능성(realizable): 프로젝트는 재정적/기술적 측면에서 현실성을 지녀야 함
 - ▷ 포용성(inclusive):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명시하고 있는 지역(커뮤니티)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승인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유사한 제안과 차별성을 지녀야 함
- **(사업분석: 3~5월)** 파리시는 제안된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뒤 제안자, 의회, 협의회 간 토론을 거쳐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함

- 3월과 4월 사이에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기술평가(타당성 및 비용평가)를 실시한 후 제안자 및 의회, 협의회 간 단체 토론을 실시하여 프로젝트의 개선 또는 병합을 진행함
- 이후 5월까지 제안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시 차원에서 기술 평가 실시하며, 프로젝트가 거부된 경우 제안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
- **(사업선정: 6~12월)** 기술평가에 통과한 제안사업은 파리시장과 무작위 선정된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승인된 경우 온라인으로 결과가 발표되며 이후 모든 파리 시민이 참여하는 투표를 거쳐 예산에 반영됨
 - 6월에는 파리시장(자치구 차원의 프로젝트인 경우 자치구의 장), 공무원, 지역 단체 대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한 사업을 선정함
 - 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프로젝트는 7월 초 온라인으로 발표되며, 제안자(혹은 수상 단체)가 홍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시 또는 자치구는 홍보 및 투표 독려를 위한 워크숍을 제공함
 - 9월에는 2주 동안 모든 파리 시민이 참여하는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는 지역구의 지정된 장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시행됨
 - 각 시민은 지역 별 프로젝트 수에 따라 최대 10개 프로젝트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현재 거주중이거나 근무 중인 지역 내에서만 투표가 가능함
 - 12월에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파리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예산을 반영하며 해당 예산안을 시의회에서 검토 및 승인함
- **(사업집행 모니터링)** 차년도에 선정된 사업을 운영 시 파리시는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와 상의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시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집행 현황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됨

-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가 파리 의회에 제출되며 주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의해 설치되었음을 알리는 표지물을 게시함(황소하 외, 2015)

표 3-4 | 파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절차

사업제안	1월~2월	• 개인 또는 단체에서 제안서 제출(14개 주제) • 온오프라인 가능, 제안사업의 경우 기준 충족 필요
	3월~4월	• 단체 토론
사업분석	4월~5월	• 엄격한 기술 평가를 거쳐 프로젝트 제출을 완료
	6월~8월	• 시민대표가 포함된 시·구 특별위원회가 제출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승인 작업 실시
사업승인	8월~9월	• 시민 투표 독려를 위한 공공 캠페인
	9월	•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직접 투표 2주간 실시
	12월	• 수상 프로젝트 발표.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
집행 및 모니터링	1월 이후	• 프로젝트 집행이 시작. 웹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 추적' 기능 제공

출처 : Participedia 홈페이지(<https://participedia.net/case/5008>)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

그림 3-3 | 프랑스 파리지 시민참여예산 웹페이지



출처 : 파리지 홈페이지(<https://budgetparticipatif.paris.fr/bp/>)

2. 시사점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로서 대구광역시와 프랑스 파리의 사례를 살펴보았음
- 우리나라와 해외사례의 경우 정치·경제·문화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도입배경, 운영 유형 및 예산 규모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됨
-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브라질에서 시작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하여 왔다는 점에서 운영 절차 등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 또한 존재함
 - 예를 들어, 운영 절차에 있어서 주민 제안-심사-선정(시민투표)을 거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존재함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 도입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함에 따라 지자체 간 주민참여예산 유형이 유사해지는 사례가 존재함
 - 특히, 행정안전부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하고 우수 자치단체 선정하는데 이를 위한 평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이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음(예: 청년참여 강조)
- 해외사례 및 국내의 우수사례를 살펴볼 경우 주민참여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주민 참여기구의 존재, 지원조직, 참여 통로 다양화 등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음
- 살펴 본 사례에서는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대상을 확대하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각 단계에서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IV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및 적정성 분석

1.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일반현황

-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1999년부터 인천광역시와 시민단체가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예산편성에 인천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왔으며 2012년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인천광역시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참여, 분야별 토론회 개최 및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왔음(이미에, 2018)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11년 조례 및 참여예산모델 개발을 위한 제도연구 시작하였으며 2012년 조례 전면개정, 201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시작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음⁴⁾
- 인천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운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참고하고 있음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budget/BUD010101>, 접속일: 2022년 7월 1일)

- 인천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모든 예산과정(예산편성, 주요 사업, 집행, 평가)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2022년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수는 397건이며 예산반영 규모는 485억 원으로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확정 사업 건수는 2020년 247건, 2021년 286건, 2022년 397건이었음
 - 예산편성액은 2019년 199억 원, 2020년 297억 원, 2021년 40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4-1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예산반영사업 추세(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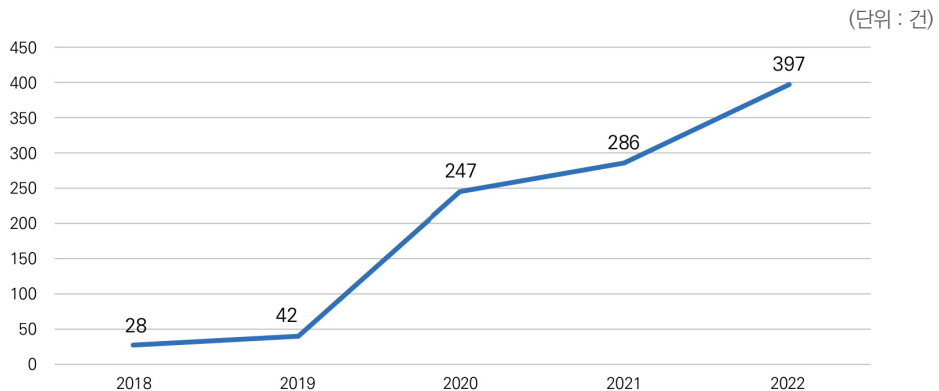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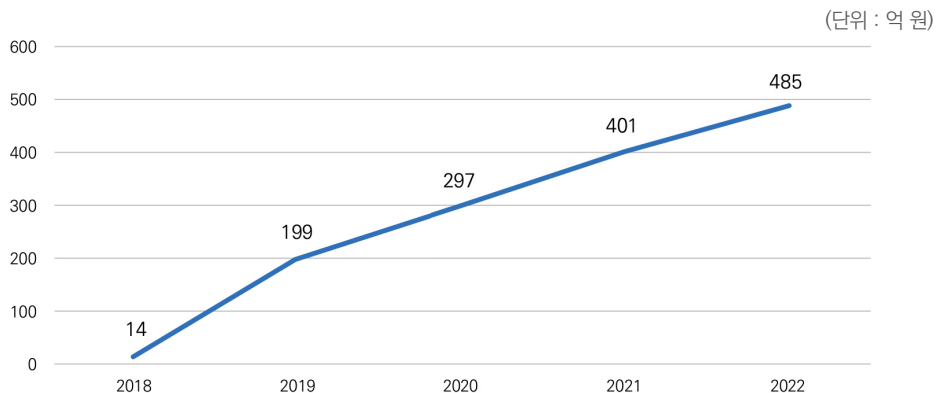


그림 4-2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액 추세(2018~2022)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유형

- 인천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은 2021년 5개 유형이었으나 2022년 3개 사업유형(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음
- ‘참여형’은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편익을 위한 시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일반시민 제안사업으로 공간환경 개선 및 문제 해결과 주로 관련이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진 제안 사업을 총회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함
- ‘협치형’은 사업제안·발굴 등 예산 과정에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특정 지역 이슈에 대해 의제별 협치단에서 발굴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심의 후 주민투표로 결정함
- ‘주민자치회형’은 읍·면·동 단위의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주도로 의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 선정하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예산 배정여부를 최종 결정함

표 4-1 | 인천시 참여예산 유형의 변화

기존(~2020)		현재(2021~)	
일반참여형	• 광역도시 문제 해결 및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	참여형	•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 편익을 위한 일반시민 제안 공모사업
참여형 시정참여형	• 민관협치기구, 각종 온라인 매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시민 제안 사업		
지역참여형	• 군·구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시정협치형	• 지역별, 계층별, 시대적 요구사항 반영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발굴	▶ 협치형	• 사업과정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 각종 경로의 시민제안에 대한 민관숙의 완료 사업 • 사업제안 과정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여 특정의제사업 발굴
협치형	• 민관 협치를 통한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제안		
동 협치형	•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 • 주민자치회가 의제발굴 및 순위선정 주도	주민자치회형	•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지원사업 • 주민자치회 운영 등 주민 속의 과정을 통한 사업

출처 : 2021년,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표 4-2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현황: 일반참여형(2022년 기준)

구분	내용
기획재정분과	• 데이터 혁신 및 도시 내 스마트시설과 관련된 사업 총 7개 • ‘시민건강 지원 서비스’, ‘주민 애로 해결형 빅데이터 분석’,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179.9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소통행정분과	• 마을 공동체 정비 및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업 총 7개 •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마을계획 수립 지원’,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26.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재난안전분과	• 재난 대비 관련 사업 총 2개 • ‘재난 소화전 안전가드 설치’, ‘어린이 안전가방 네임택 지원’이 이에 해당하며, 총 6.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경제산업분과	• 반려견 및 야생동물 관리, 농·축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업 총 8개 •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9.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해양항공분과	• 해양환경 관리 및 관련 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 총 6개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역 야간경관등 설치’, ‘인천국제공항 주변 주민운동아카이빙’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13.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복지보건분과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시민건강과 관련된 사업 총 15개 • ‘거리흡연자 개선’, ‘장애가족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20.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여성가족분과	• 여성 및 아동과 관련된 사업 총 8개 • ‘시설아동 건강검진 비용’,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비 지원’, ‘청소년 영화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11.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문화관광분과	• 지역 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총 9개 • ‘길거리 버스커 지원 문화예술사업’, ‘독서치료’ ‘악기연주 경연대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9.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환경복지분과	• 환경보호 및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 총 8개 • ‘공원 조성 사업’, ‘환경교육’, ‘체육시설 기능보강’ 등이 이에 해당하며 26.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교통분과	• 교통관련 시설 정비 및 교육을 위한 사업 총 5개 •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2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도시건설분과	• ‘바닥 LED, 태양광 가로등 설치’, ‘초보자전자교실운영’이 이에 해당하며 총 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IFEZ 분과	• ‘스마트신호등 설치’, ‘산책로 조성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총 1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자료 : 인천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2017~2022) pp.24~26 요약 및 재정리

- 참여형 사업은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들로, 일반시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성
 - 전통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모 유형으로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또는 사업을 제안하도록 유도
 - 해당 사업에는 기획재정, 시민안전, 일자리 및 복지, 여성가족, 환경 등 시정 전 분야가 포함됨
 - 따라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되며,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기대효과가 특정 집단이 아닌 시민 일반에 보편적으로 분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특징을 지님
 - 행사성 사업은 지양되며, 단순 금품 제공 또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혜적 사업 역시 참여형 사업에서 배제된다는 특징을 지님
- 협치형 사업은 사업제안과 발굴 등 예산 과정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구성
 - 해당 사업에는 협치단을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되는데, 이때 협치단은 기존의 분야별 정책 발굴기구(일자리위원회, 청년네트워크 등)를 활용하거나 새롭게 협치단을 구성하게 됨
 - 최근, 2019년부터 참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청년 또는 상대적 참여 소외계층인 청소년, 장애인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예산제도의 사회적 포용력을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
 - 예를 들어, 2019년에는 협치형 사업에 청년, 여성, 청소년 분야가 포함되어 논의되었고, 2020년에는 여성,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족, 2021년에는 청년 관련사업이 중점적으로 발굴되고 구체화되었음
 - 2022년 기준 총 64개의 사업이 협치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취약노인 맞춤형 영양관리 및 급식지원’, ‘민관협치 역량강화교육 운영’, ‘지역아동센터 해충 방역 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273.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 주민자치회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구성
 - 해당 사업에는 안전, 육아, 복지, 공동체 강화 등 주민의 일상적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의제가 포함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역시 해당
 -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지역위원회(읍면동 단위)에서 제안된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연관이 있으나 주민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가능

표 4-3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현황: 주민자치회형(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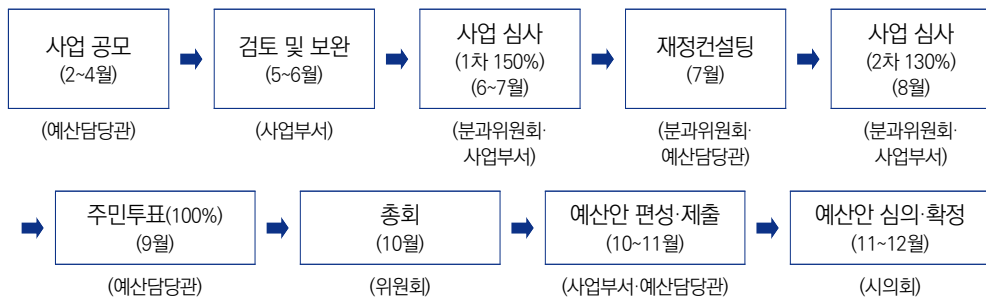
구분	내용
중구 (18개 사업)	•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우리동네 벽화 그리기’, ‘환경교육’, ‘마을 꽃길 조성 사업’ 등 생활과 밀접한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 총 2.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동구 (26개 사업)	• ‘지역 축제’, ‘스마트폰 배우기’, ‘기초영어회화’ 등 문화생활 및 교육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 총 3.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미추홀구 (38개 사업)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언덕길 휴식익자 설치’, ‘숲 축제’, ‘육교 조명 설치사업’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 총 4.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연수구 (20개 사업)	• ‘벽화그리기’, ‘길거리 문화공연’, ‘계단설치’ 등 문화생활 및 지역 내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 총 2.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남동구 (37개 사업)	• ‘마을신문 발간’,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 ‘소규모 꽃길 조성’ 등 문화생활 및 지역 내 환경을 위한 사업 등이 이에 해당. 총 4.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부평구 (34개 사업)	• ‘주민자치대학’, ‘세계요리 체험’, ‘밤길 조성’ 등 문화생활 및 지역 내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이에 해당. 총 3.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계양구 (54개 사업)	• ‘나눔장터’, ‘안심벨 설치’, ‘재난안전 체험교육’, ‘이웃 빵 나눔’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 총 4.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서구 (20개 사업)	•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어린이 공원 화단조성’ 등 지역 활동을 촉진하고 환경여건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이 이에 해당. 총 4.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옹진군 (7개 사업)	• ‘농수특산물 홍보사업’, ‘고유먹거리 발굴’, ‘찾아가는 이미용실’, ‘공구도서관 설치’ 등 지역 홍보와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 총 1.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자료 : 인천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2017~2022) pp.24~26 요약 및 재정리

주민참여예산 추진절차

- **(참여형: 사업제안 및 심사)**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참여형 사업의 경우 주민의 제안 사업이 접수(사업 공모)되면 사업부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2차례의 심사와 재정컨설팅을 거쳐 주민투표에 상정됨
- **(주민투표)** 예비선정된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하는데 이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게 됨
 - 주민투표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
- **(예산안 편성 및 확정)** 일반시민, 시장, 시의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표 후 시민 의견 수렴, 그 후 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 의결 후 확정

그림 4-3 | 참여예산 세부 추진 절차: 참여형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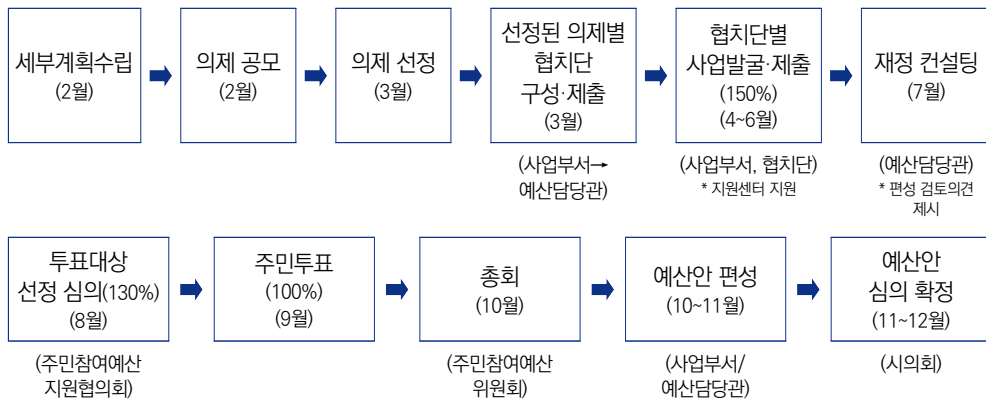


출처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p.6)

- **(협치단: 구성 및 사업 발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협치형 사업의 경우 의제를 공모한 후 선정된 의제별로 협치단을 구성하고 협치단 회의를 통해 제안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함
 - 제안서를 대상으로 재정컨설팅을 실시하며 예산담당관은 편성 검토의견을 제시한 뒤 최종 제안서가 확정됨

- **(심사 및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주민투표 실시함
- **(예산편성 및 확정)**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을 보고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의결 후 확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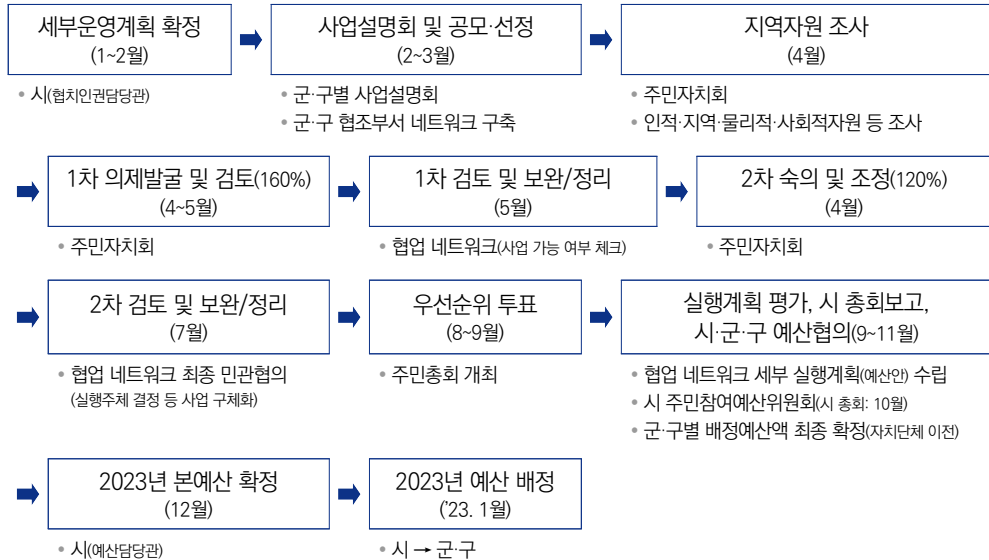
그림 4-4 | 참여예산 세부 추진 절차: 협치형 사업



출처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p.10)

- **(주민자치회형: 사업설명 및 지역자원 조사)** 읍·면·동 단위에서 진행되는 주민자치회형 사업의 경우 사전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회·동센터의 참여 및 실행 의지를 파악한 뒤 시·군·구·읍면동 연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굴 의제사업에 대한 검토 및 지역 자원 조사 과업을 시행하도록 함
- **(의제발굴)** 총 두 차례에 걸쳐 읍·면·동의 사업 의제를 발굴·검토함으로써 사업 내용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적절한 실행주체를 설정함
- **(투표 및 예산확정)** 발굴된 사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협업 네트워크가 사업 구체화를 실시하고 총회 승인으로 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사업별 구체적 예산계획에 대한 시 검토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함

그림 4-5 | 참여예산 세부 추진 절차: 주민자치회형 사업



출처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p.13)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특징

- 인천광역시는 참여예산기구 기능 강화 지원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지원협의회)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원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 지원의 기능을 담당
 - 지원협의회 위원은 전문가, 관계자, 공무원 등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됨
 - 지원협의회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예산기구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협의회 활동이 실질적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참여예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의 임무를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음([표 4-4] 참조)
 - 주민참여예산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센터장을 비롯한 총 5명의 인력으로 구성됨

표 4-4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주요 활동(2022년 기준)

주요 활동	내용
예산학교 운영	• 참여예산에 대한 단계별 교육 운영 • 위원회 위원 대상 필수 교육과정 운영
운영 지원	• 분과위원회 회의 지원 • 협치단별 회의 지원 및 기본 교육 실시
생태계 조성	• 주민참여예산 집담회, 온라인 공론장 확대를 통한 의견 공유 • 자치단체 협업체계구축 • 시민기자단 운영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 청소년 대상 참여예산교육 실시 • 교육 수료 후 희망자에 한해 협치단을 구성하고 청소년 분야 사업 발굴
기획 및 홍보	• 공동주택 홍보물 부착, 송강기 홍보 영상 송출 등

출처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p.20) 저자가 정리

- 인천광역시시는 협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학교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 예산학교는 참여예산과 관련된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기본과정(2과정), 심화과정(3과정), 전문과정(6과정) 등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

표 4-5 | 인천시의 예산학교 운영 과정(2022년 기준)

교육과정	내용	대상
기본과정	• 상설예산학교 • 온라인 콘텐츠 수어 보강	시민
심화과정	• 참여형 의제 발굴 • 섬 지역 예산학교 • 찾아가는 예산학교	
전문과정	• 신입위원 기본교육(심의 및 모니터링 등) • 심화교육(주민제안 심의 실습, 분야별 의제 발굴 등) • 참여예산 리더 교육 • 성인지 교육	참여예산위원
	• 협치형 사업 발굴 교육	협치단

출처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p.25)

2. 주민참여예산 적정성 분석

유형의 적정성

- **(사업유형 현황)** 인천광역시는 최근 주민참여예산 유형을 5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변경·통합하였음
 - 2020년까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5개의 유형(일반 참여형, 지역 참여형, 시정 참여형, 시정협치형, 동협치형)으로 운영되었음
 - 복잡한 유형을 단순·체계화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3개 유형(참여형, 협치형, 동협치형)으로 통합하여 운영 시작함
 - 시민참여 저변 확대 및 참여율 제고 차원에서 2020년부터 사업과정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치형(2019년 시 계획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동 계획형 사업을 시작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숙의·공론화를 거치는 주민자치회형을 도입하였음
- **(타 광역시 사업유형)** 타 광역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시민참여 제고를 위해 신규 유형 도입 및 변경을 시도하고 있음
 - 2019년 이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주민자치회형 등을 신설하였음
 - 광주광역시는 정책연구형을 도입하여 청년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는 정책숙의형을 통해 지속발전도시구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일부 광역시의 경우 구(또는 군)와 동(또는 읍면동)에 적용되는 유형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예: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시키고 있음

표 4-6 | 주민참여예산 유형 정리(2022년 기준, 6대 광역시)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	
인천 광역시	• 시소관사업 • 2개이상 군구사업 • 240억 원	• 협치형 • 민관공동참여 • 200억 원	• 읍면동단위 • 주민자치회 운영 • 60억 원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협치형
부산 광역시	• 시소관사업 • 단년(예산 제한없음) • 90억 원	• 구군소관사업 • 구군별 4억 원 • 1억 이내 사업 • 40억 원	• 민관협력 (광역시도시문제) • 사업별 2억 원 이내 • 20억 원	• 민관협력 (생활밀착형: 구or동) • 구군별 2억 원/ 5백만 원 • 20억 원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구군참여형	읍면동참여형
대구 광역시	• 시소관사업 • 3억 원 이내 • 90억 원	• 청년정책사업 • 3억 원 이내 • 20억 원	• 주민참여예산위 자율권 • 5천만 원 이내 • 40억 원	• 읍면동 평가 (20%범위 내 차등지급) • 40억 원(읍면동별 28백만 원 이내)
	시정참여형	정책연구(청년참여)형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
광주 광역시	• 시소관사업 • 단년(5억 원 이하) • 90억 원	• 청년정책사업 • 10억 원	• 구소관사업 • 단년(5천만 원 이하) • 20억 원	• 주민자치회 운영동 대상 • 자치구별(1억 원)
	시정참여형	정책숙의형	구정참여형	1. 동분야지원형
대전 광역시	• 시소관사업 • 3억 원 이내 • 50억 원	• 지속발전도시구현 사업(3억 원~10억 원) • 60억	• 구 소관사무 • 2억 원 이내 • 50억 원	• 주민조직/자치회 • 행정동별 5천만 원 이내
				2. 마을계획형
				• 행정, 법정동, 아파트 • 행정동별 5천만 원 이내
	시정제안사업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일반참여사업 (사업부서 주도)
울산 광역시	• 시소관사업 • 규모 제한없음	• 구·동사업 • 개인균등분 주민세 (31.6억 원)	•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4개소: 3억 원 지원) • 마을계획단 운영 (7개소: 천만 원 지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구군별: 1억 원 예산)	• 시민참여·의견청취 • 참여예산위원 90명 • 부서별 신규사업 및 50억 원 이상 계속사업 대상

출처 : 6대 광역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은 2011년 이후 제도 도입이 결정되고 초기에 형성된 참여예산의 일부 유형이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견고화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초기에 행정안전부가 제시했던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및 2010년 제시하였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모델안’에 제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델(유형)은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제한적으로 관료조직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서정섭 외, 2017, 26)
 - 주민참여(제안)형(참여형, 시정참여형 등)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도입되었던 유형으로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상향식 의사결정의 성격을 가지며 제안 주민에게 정책 효능감 및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주민참여(제안)형은 제도 도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유형변경이나 개선에 있어 정치적 저항 내지는 주민 반대에 직면하는 상황 발생⁵⁾하였음
 - 광역시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2015년 이전까지 주민참여예산 유형이 개발되지 않았으나 ‘2개 이상 자치구에 관련된 사업’ 등의 방식으로 광역시에 특화된 유형이 등장하여 지속됨
 - 협치형의 경우, 주민과 관료 사이의 협업을 및 숙의과정을 통해 주민이 예산 참여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과 행정사업부서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여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의 품질을 향상하는 장점을 가짐(서정섭·이장욱, 2018, 106)
 - 다만, 협치형은 주민(또는 시민단체)와 행정사업부서 사이의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고착화 되는 경우 하위정부모형에서 논의되는 일종의 견고한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사업결정 및 집행에 투명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자 인터뷰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추진된 협치형(민관숙의원료형)의 경우 시민이나 협치단에서 제안된 사업이 별도 심의과정이나 주민투표 없이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존재함

5)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가 주민참여형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주민 및 시민단체의 저항에 부딪혀 추진을 보류함

- 주민자치회형(동단위계획형 또는 지원형)은 마을 단위 또는 자치구단위에서 주민 생활 밀착형 행정사업 뿐만 아니라 실험이 가능한 혁신적 사업 발굴하기 위해 제안된 주민참여예산의 방식임
- 광역시 차원에서 새로운 또는 혁신적 사업을 실험하여 정책으로 도입하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며 수직·하향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주민참여의 형식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므로 주민자치회형은 행정의 최소단위에서 수행되어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점에서 선호됨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제 평가에서 광역시의 시군지원 모델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서의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해당 제도가 고착되는 경향이 있음
- 타 광역시 사례, 전문가 토론,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2022년에 주민 참여예산제도 유형 개편은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향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도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는 재정난으로 인해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광역단위에서 운영되는 참여예산제도의 유형들을 수용하여 내실화하여 왔음
 - 2022년에는 체계적인 유형 정립을 위해 5개 유형을 단순화하여 3개 유형으로 수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도함
 - 운영 중인 주민참여의 세 가지 유형의 경우 주민 참여 및 지역 행정수요 충족 측면(참여형),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협력·숙의를 통한 사업 품질 향상 측면(협치형), 마을 밀착형 사업 발굴 및 주민자치 네트워크의 활용을 극대화(주민자치형) 측면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2022년에 제안된 3가지 유형은 주민참여 확대라는 제도적 지향 및 제도 내실화 노력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 2022년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유형은 각 유형 별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3유형 중 참여형은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일회성이 강하며 장기적인 지역 수요 및 지역 현안 문제의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존재함
- 또한 협치형의 경우 특정 시민단체와 사업부서 간의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공고하여 사업 선정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 공개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형의 경우 구·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사업 중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위에서 언급된 점들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수요의 근본적 대응을 위한 사업발굴, 공정성·투명성 강화, 구·군 주민참여예산제도와와의 조화를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적정성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8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액은 14억 원이었으나 201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9년 199억 원, 2020년 297억 원, 2021년 401억 원, 2022년 485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2018년 주민참여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4억 원 수준인 반면 2019년의 경우 185억 원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매년 80억 원~100억 원 사이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편성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8년 30.2%이었으나 2019년 1,321%를 기록한 이후 2020년(49.2%)부터 2022년(20.9%)까지 감소 추세임
- 타 광역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규모에 증가 추세를 보이는 단체가 존재하는 반면 증가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선 단체도 존재함
 - 대구광역시(2018년 130억 원 → 2022년 178억 원)와 대전광역시(2018년 29.5억 원 → 2022년 194억 원)의 경우 예산 편성규모에 있어 증가 추세를 보임
 - 한편,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2019년 예산 편성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20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음

- 울산광역시: 광역시 가운데 제일 큰 규모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484억여 원으로 감소한 뒤 2022년 510억 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의 2022년 주민참여예산의 평균 규모는 200억여 원대임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규모는 타 광역시 평균 규모, 증가액 및 증가율 규모, 1인당 편성액을 고려하였을 때 상위권에 속함
 - 2022년 울산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은 510억 원이었으며 인천광역시는 485억 원으로 뒤를 잇고 있음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규모는 2019년 급격하게 증가(14억 원 → 199억 원, 1,321% 증가)하였으며 증가폭도 8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로 큰 편임
 - 이러한 예산규모, 증가율을 고려하였을 때 타 광역시에 비교한다면 인천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 규모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아래 [표 4-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민들의 사업 제안 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업 1건당 예산액으로 살펴 볼 경우 2022년은 오히려 감소 추세(7천 8백만 원 → 5천 1백만 원)에 있음
 - 시민제안 건수의 증가(주민 수요 측면) 경향과 주민의 시정 참여 및 주민 주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총예산 중 참여예산에 의한 반영비율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점(2022년 0.24%)을 고려한다면 규모 자체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규모의 조정은 재량 판단 사항으로 보여짐
 - 추후 자치단체장, 시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반시민 사이의 토론 등을 통해 적절한 참여예산 규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표 4-7 | 주민참여예산 규모(예산 및 사업건수) 및 변동 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천광역시	예산목표액	-	300	400	500	500
	예산편성(억)	14	199	297	401	485
	증가액(억)	4	185	98	104	84
	증가율(%)	30.2	1321.4	49.2	35.0	20.9
	제안건수	38	147	521	512	934
	예산반영건수	28	42	247	286	397
	인구수(만)	295.4	295.7	294.2	294.8	295.5
	사업당 예산액(만)	3684	13537	5700	7832	5192
	총예산 중 반영비율	0.02%	0.12%	0.17%	0.17%	0.24%
부산광역시	예산목표액	-	40	170	130	170
	예산편성(억)	184	225	164	75	70
	증가액(억)	-260	41	-61	-89	-5
	증가율(%)	-41	22	-27	-54	-6
	예산반영건수	30	26	112	154	126
	인구수(만)	344.1	341.4	339.2	335.0	333.8
	총예산 중 반영비율	0.22%	0.13%	0.09%	0.03%	0.03%
대구광역시	예산목표액	130	140	150	180	190
	예산편성(억)	130	138	149	148	178
	증가액(억)	35	8	11	-1	30
	증가율(%)	36.8	6.1	7.9	-0.6	20.2
	예산반영건수	325	378	443	398	562
	인구수(만)	246.1	243.8	241.8	238.5	237.7
	총예산 중 반영비율	0.23%	0.10%	0.11%	0.09%	0.12%
대전광역시	예산목표액	30	30	100	150	200
	예산편성(억)	29.5	30	99	145	194
	증가액(억)	10	0	70	45	50
	증가율(%)	50	0	233.3	50.5	34.4
	예산반영건수	35	41	135	216	336
	인구수(만)	148.9	147.5	146.4	145.2	144.9
	총예산 중 반영비율	0.08%	0.04%	0.12%	0.14%	0.20%

		2018	2019	2020	2021	2022
광주광역시	예산목표액	120	120	120	125	125
	예산편성(억)	66	75	72	68	58
	증가액(억)	11	9	-3	-4	-10
	증가율(%)	20.0	13.6	-4.0	-5.6	-14.7
	사업건수	24	34	35	52	48
	인구수(만)	145.9	145.6	145.0	144.1	143.6
	총예산 중 반영비율	0.18%	0.09%	0.09%	0.06%	0.06%
울산광역시	예산목표액	1235			1216	959
	예산편성(억)	1179	1266	1315	484	510
	증가액(억)	225	87	48	-831	26
	증가율(%)	23.6	7.4	3.9	-63.2	5.4
	사업건수	61	81	55	82	55
	인구수(만)	115.5	114.8	113.6	112.1	111.6
	총예산 중 반영비율	4.30%	1.96%	2.08%	0.63%	0.71%

출처 : 6대 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 **(사업유형간 예산규모 비교)** 인천광역시는 2022년 주민참여형에 240억 원, 협치형에 200억 원, 주민자치회형에 60억 원을 배정하였음
 - 2021년의 경우 참여형에 200억 원, 협치형에 250억 원, 주민자치회형에 50억 원을 배정하였음
 - 2021년 대비 2022년의 경우 참여형과 주민자치회형이 각각 40억 원, 10억 원 증가한 반면, 협치형이 50억 원 감소하였음
 - 주민참여예산의 유형으로서 협치형은 이미 언급한 바대로 행정사업부서와 주민 또는 시민단체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숙의절차를 활용하는 장점이 존재하는 반면, 최근 숙의과정 및 사업선정의 투명성, 공개성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이슈들을 고려할 때, 주민참여형과 협치형 사이의 예산 규모 조정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 한편, 주민자치회형의 경우 참여예산 규모의 확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기초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서구의 참여예산 규모가 1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중복사업의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적정성 여부 판단과 예산 배분의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8 | 사업유형별 예산규모 변동(2021-2022년)

(단위: 억 원)

	2021년	2022년	증감
참여형	200	240	+40
협치형	250	200	-50
주민자치회형	50	60	+10

출처 : 2021년,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3. 주민참여예산 추진 절차의 적정성

사업제안 및 부서검토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참여형 사업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제안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부서의 검토·보완 및 재정컨설팅 과정을 통해 사업 구체화를 뒷받침하고 있음
- **(타 시도 사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안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강화와 교육 및 자치위원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사 및 선정 과정에 상정되는 사업 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검토·보완과 재정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 제안 아이디어의 채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서 검토 이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기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시흥시의 경우, 사업제안서 제출 전 참여예산학교와 주민자치위원 등과 협업하여 사업제안서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사업제안 후 사업부서 검토 전에 시 주민예산참여위원회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제안서의 품질과 효율성, 공정성을 높이고 있음
- 유사·중복사업에 대해 사업부서, 위원회, 제안자 등과 검토와 숙의를 거쳐 통폐합을 유도하여 최종 선정 절차에 상정되는 사업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사례를 참고할 만함
-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워드클라우드, 추이 예측, 맵핑 시스템)을 실시⁶⁾하여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제안 및 분석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대응에 활용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시에 부적정 참여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사업제안 및 검토 절차의 적정성)** 인천광역시는 사업제안 및 검토 절차 구축에 노력하여 왔으며 비교적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왔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함
 - 인천광역시는 주민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왔음
 - 또한, 다양한 계층 및 세대의 행정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왔음
 - 협치형과 주민자치회형은 협치단 및 주민자치회의 주도로 제안 사업을 발굴하고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사업부서 관리카드 작성 및 재정컨설팅 등을 통해 컨설팅 및 사업 검토 절차 강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의 사업제안 및 검토 절차는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6) 대구광역시 뉴스룸(<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aster=&mvid=576&mnt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245691>, 접속일: 2022년 7월 12일)

- 다만, 협치형에서 의제선정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컨설팅 결과 및 주민 수요의 충족 측면에서 일부 컨설팅 및 사업보완 절차를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부서 검토 및 보완의 내용은 사업의 적법성(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과 적정성(사업이 타당한지 여부)과 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
- 마지막으로, 각 사업 유형마다 실링이 존재하는 가운데 사업제안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링을 채우려는 시도로 일회적·민원성 사업이 제안되며 일부의 경우 특정부서 사업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어 들어온다는 비판이 존재함

사업심사 및 선정절차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사업심사 및 선정과정은 참여예산위원회, 주민투표 및 총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과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심사 절차는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나 사업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분과별 실링 100%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총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침
 - 분과위원회가 선정 보고한 사업에 대해 온라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할 사업을 선정하고 총회에서 최종 선정을 함
 - 다만, 협치형의 경우 주민투표대상 사업선정을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진행한 뒤 주민투표로 예산편성 대상 사업을 선정함
 - 주민자치형의 경우 주민자치회, 동, 군·구로 구성된 협업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된 사업 의제에 대해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 투표를 실시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 협업 네트워크가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총회에 보고함

- **(타 시도 사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자들 간의 숙의과정 강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
 - 일부 타 시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충분한 회의 횟수 및 시간을 갖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충청남도 서천군의 경우 사업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안서에 부서 검토항목으로 숙의/공론과정 및 사업 구체화에 활용 가능한 7가지 항목에 제시하고 있음: “① 필요성(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② 적정성(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거나 선심·낭비성 사업은 아닌가?), ③ 시급성(2022년에 즉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인가?), ④ 실현 가능성(사업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⑤ 파급효과(사업 완료 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⑥ 보조금 지원사업 여부, ⑦ 종합 검토의견(제안자 협의 과정, 종합 검토 의견)”
 - 서울특별시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반시민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플랫폼 내에서 공론화 과정과 민관숙의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500명 이상 공감하여 공론화 된 시민 제안 사업에 대해 공론장에서 30일간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민관숙의를 거쳐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시민제안 사업이 정책화되어 예산에 편성됨
- **(사업심사 및 선정절차의 적정성)** 인천광역시시는 사업심사 및 선정절차 강화를 위해 운영 기구를 설치하고 숙의과정 강화를 시도하여 왔으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함
 - 인천광역시시는 위원회 분과별 워크숍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실·국 담당자 간 소통 및 협치 강화를 시도해 왔음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및 협치형 사업의 심사 및 선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과별 회의 지원, 온예산 스터디, 예산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함
 - 제안사업 심사과정에 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실국별 조정협의체 또는 전체 조정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도해 왔음
 - 분과위원회별 예산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였음

- 또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집담회, 컨퍼런스, 자치군·구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참여예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
-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주민의 의견은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 시에 전달되어 차년도 운영계획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제도 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고 있음
- 이러한 인천광역시의 제도 개선 시도를 타 광역시의 절차 등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인천광역시의 사업심사 및 선정 절차는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인터뷰에 따르면 절차 운영에 있어서 협치형과 주민자치형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심의 권한이 없으므로 속의 절차 및 사업선정 측면에서 위원들의 불만이 존재함
- 협치형 및 주민자치형 사업에 대한 정보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유되지 않아 사업 간 중복 방지, 통폐합, 사업간 조절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창의적 또는 시급한 사업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심의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위원회 참여율 저조로 인해 회의 성원 부족으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함
- 심의 과정의 부족은 결국 제안 사업에 대한 속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선정에 있어 공정성 그리고 속의 내용 공개에 따른 투명성 문제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사·속의 과정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민관 사이의 소통과 협치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원센터의 민간지원관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며, 민간지원관이 불출석하는 경우 분과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개설된 이후 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된 회의를 지원센터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시설이 협소하여 분과위원회가 충분히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들 간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임
- 그러므로 사업심사 및 선정 절차의 운영이 설계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방식을 조정·보완될 필요가 있음

사업집행 및 결산

- 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예산편성 과정 뿐만 아니라 집행, 결산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를 해왔음
 - 인천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분과별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모니터링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예산낭비 방지 및 우수 사업 선정에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군·구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평가제를 실시하여 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시책 참여도 등을 서면으로 평가(필요 시 현장평가 병행)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12월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음
- **(타 시도 사례)** 일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결산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추가하고 있음(임성일 외, 2019)
 - 서울시 은평구에서는 구에서 시행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연계한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제안주민과 사업부서 사이에 공동협약식을 시행하고 주민제안 감리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 수원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자를 주민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5년에 시민참여결산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이전 회계연도 결산안을 주민들에게 미리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결산마당’을 개최하여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50억 원 이상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결과에 대해 시민결산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함(임성일 외, 37)

- 부산광역시에서는 2019년부터 주민참여결산제를 실시하여 결산과정에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2018년 시민참여예산제도 결산분야 설명회를 열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지방재정자치 제고를 위해 노력함
- **(사업집행 모니터링 및 결산 절차)** 인천광역시는 사업집행 및 평가 결산 절차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갖추어 가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는 현황에서 언급된 제도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산을 시도해 왔음
 - 사업 집행 모니터링의 경우, 모니터링에 참여한 주민 위원들에 의해 상·하반기별로 사업관리카드가 작성되며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가 하반기에 사업 개선에 반영되는 경우도 존재함
 - 다만,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대부분이 단년도 사업이라는 점에서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결산 및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환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평가 내용이 축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상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제시된 사업 개선의견에 대해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경우, 연임이 쉽지 않아 단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 및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교육의 경우 강의 커리큘럼이 단순하여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어렵고 청소년 교육의 경우 교육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음
 - 그러므로 인천광역시는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산 및 평가에 대한 환류, 예산 편성 이후 과정에 대한 교육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

1.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은 사업 유형, 규모, 절차 측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형 및 절차 운영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유형

- 2022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3가지 유형(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형)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기본 방향 및 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민선 8기의 출범을 맞아 제도 개선을 위하여 3가지 개선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개선안은 현행 유형을 유지하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제1안), 참여형과 협치형의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제2안), 기존 유형을 주민참여형으로 통폐합하는 안(제3안)을 포함함
- **(제1안)** 2022년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의 3가지 유형을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빈번한 유형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각 유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유형 모델은 최근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참여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제도가 정착되어 숙성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3가지 유형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참여 통로를 제공할 수 있음
- 제1안의 경우 주민 참여 및 지역 행정수요 충족에 적합한 참여형,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협력·숙의를 통한 사업 품질 향상이 가능한 협치형, 마을 밀착형 사업 발굴 및 주민자치 네트워크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형의 3가지 사업 유형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제1안을 선택할 경우, 각 유형의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제도를 정교화·성숙화 할 필요가 있음
- **(제2안)** 2022년에 운영되던 유형에서 주민자치회형을 폐지하고 참여형과 협치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주민 참여 및 호응도가 높은 참여형과 거버넌스체계 및 숙의·공론화를 통한 협치형의 유지를 통해 광역단위에서 운영·지원가능한 부분에 집중하여 효율화 가능
 - 제2안의 경우 참여형과 협치형을 유지하되 광역시 차원에서 가능한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광역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및 성숙 도모 가능
 - 또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주민자치회형의 경우 관리부서(협치담당관실)가 다르다는 점에서 유형 간소화를 통해 운영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주민자치회형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 측면에서도 중복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 기존의 주민자치회형에 배정된 예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광역과 기초단체 간 역할분담 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제3안)** 2022년에 운영되던 유형을 통폐합하여 참여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초점을 주민 참여 사업에 맞추고 효율적인 관리 가능
 - 참여형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는 유형으로 참여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제3안의 경우 참여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광역차원에서 주민 직접 공모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 가능하며 주민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3가지 유형으로 인해 분산되어 있던 관리체계(예산담당관실, 주민참여지원센터, 협치담당관실)를 단일화하여 제도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협치형의 경우 제도 운영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 등에 논란이 있어 왔던 만큼 이러한 우려 불식 가능
- 제2안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광역과 기초단체 간 역할분담 방식 체계화를 통해 주민 자치회형에서 제기되던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참여형으로 사업을 공모할 경우 단년도 사업이 주를 이루며 실질적 사업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함
- 또한, 민관네트워크 및 숙의절차 활용을 통한 제안사업 품질 강화라는 협치형 및 주민자치회형의 장점을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제3안의 경우 협치형 및 주민자치형의 운영 방식을 일정 부분 반영하여 주민 제안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숙의제도 및 교육 개선, 참여방식의 개선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제3안 도입 시 협치형을 통해 발굴 가능하던 사업의 참여형에서의 발굴 방안, 주민 참여지원센터의 역할 재설정, 주민자치회형 배정 예산의 배분 등에 대한 협의 및 제도 수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표 5-1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유형 개선을 위한 방안

제1안			제2안		제3안
참여형	협치형	주민 자치형	참여형	협치형	참여형
• 현행 유형 유지 • 운영 방식 개선			• 참여형, 협치형의 2유형으로 통폐합		• 참여형으로 단일화(통폐합) • 사업발굴방안 보완, 주민참여지원센터 역할 재설정필요
• 빈번한 유형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방지 • 각 유형의 장점 활용 가능 • 주민에게 다양한 참여 통로 제공			• 유형 간소화 • 운영 및 관리 주체 혼란 감소 • 광역형 주민참여사업에 집중		• 주민이 제안한 광역형 사업에 집중 • 복잡한 운영·관리체계의 간소화로 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 협치형과 주민자치형 운영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차단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규모

- 2022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운영에 있어서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민참여예산 실제 예산편성액 규모는 2018년 14억 원에서 2019년 199억 원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음
 - 2022년 주민참여예산 규모(500억 원)는 평균 규모, 증가액 및 증가율을 고려하였을 때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상위권에 속하지만 시민제안 건수의 증가 경향(주민 수요 측면) 및 주민의 시정 참여 강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향후 지속적인 규모 확장보다는 지금까지 확장된 예산 규모를 활용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주민 수요의 실질적 반영,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제안 사업의 선정 및 심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유형별 주민참여예산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협치형 운영에 있어서 최근 숙의과정 및 사업선정의 투명성, 공개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주민자치회형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으로 인해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이슈들을 고려할 때, 각 사업 유형별 운영방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유형 간 예산 규모 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단계별 추진 절차 개선 방안

(1) 사업제안 및 사업검토

- 협치형 및 주민자치회형의 사업발굴 및 제안 과정에 투명성·공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 2022년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3유형 중 일부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 협치형 및 주민자치회형의 사업 발굴 및 제안의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 또는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음
 - 협치단 또는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사업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관 협치 정책발굴기구 및 제안사업 선정 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협치단 또는 주민자치회의 사업 발굴 및 제안사업 선정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에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여러 자치단체에서 정보 공개의 범위를 적극 확대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업제안 및 심사를 위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제안사업 공모 시 부적정 제안자를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주민 및 지역사회에 제안사업 및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제안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현안 및 행정수요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효과적인 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숙의 절차 참여자들에게 사업유형별 정보에 대한 칸막이가 존재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여야 함
 - 대구광역시의 사례처럼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제안 및 최종선정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부적정 제안자 또는 부정적 투표자를 걸러낼 수 있는 체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 사업유형 또는 대상별 예산 한도(실링)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및 제도 추진 방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그동안 사업 유형별 한도(실링)를 제시하여 왔음
 - 그러나 일부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사업제안 부족으로 차년도 예산 한도 삭감을 막기 위해 일회성 또는 단순민원성 사업을 제안하는 부작용이 존재함
 - 한편, 지나치게 적은 예산 한도(실링)의 경우 다년도 사업이나 실질적인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어렵게 하기도 함
 - 이러한 한계들을 고려하였을 때, 주민참여예산 계획 수립 시 사업유형 별 한도설정은 지양될 필요가 있음
- 사업제안 및 선정 등 전 과정에 컨설팅을 확대하여 사업제안서의 품질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에 노력하고 있으나 컨설팅을 전과정에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흥시의 경우 사업제안서 제출 전 참여예산학교 등과 협업하여 사업제안서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제공하고 사업제안서를 사업부서가 검토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
-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부서 공무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업 제안서 제출 전에도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함
-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기능을 재설정하여 협치형 업무에 대한 지원보다는 컨설팅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컨설팅 강화 및 사업제안서 품질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2) 사업심사 및 선정 과정

-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사업심사 및 선정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후부터 사업 선정의 전 과정(진행상황, 심사여부, 심사기준, 심사결과, 결정 이유 등)에 대해 사업제안자(트래킹 시스템 제공)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주민 사업제안 내용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숙의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의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하고 숙의과정을 공유 및 공개하여야 함
 -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일반시민이 참여한 숙의 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음
 - 현행 숙의 과정은 회의 횟수(예: 3회) 및 비용 제공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사이에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 횟수가 제한될 경우 위원장 선임, 총회 개최 등의 절차적 과정에 대한 필요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 처리로 귀결될 수 있음

-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예산 자체의 부족으로 회의비 지출이 어렵다면 숙의 과정을 지원할 수 없게 되고 숙의 시간 부족은 사업에 대한 공개할 만한 검토 내용 부족으로 이어져 투명성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실질적인 참여 채널의 지속적인 존재와 이를 통한 숙의 경험은 참여시민의 신뢰를 강화시키고 시민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음
- 협치형 사업선정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주민투표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바, 일반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심의 결과 탈락한 제안서의 경우 탈락이유(절차적·행정적·법적 이유 등)를 상세히 기술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탈락한 유사 사업이 많을 경우 사업부서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통해 차년도에 제안 및 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여 시민수요를 사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탈락사업 중 유사 케이스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사업은 시급성이 높은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한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함
 - 충청남도 서천군의 경우 사업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안서에 7가지 항목에 대해 탈락이유를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탈락사업 중 사업제안서 개선을 통해 사업 선정이 가능한 아이템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 제안된 사업을 단순 심사하여 단년도 사업 수행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제안 사업 간 또는 타 행정서비스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현안 문제를 발굴하여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주민들에 의해 제안되는 여러 사업 중 유사 지역의 유사 사업의 경우 사업을 제안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협력하여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 후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특정 하천 부지에 체육시설 또는 문화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제안이 다수 확인되었다면 하천 부지 종합개발 계획 등으로 사업 구체화를 모색해 볼 수 있음

- 또한, 주민 제안사업을 단순 사업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지역 현안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고민하여 이를 보충·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CCTV 설치에 대한 제안이 계속 제기된다면 해당 지역에 치안이 문제인지 생활 및 환경 복지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가 문제인지를 확인하여 다른 행정서비스와의 연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집행 및 결산

- 제안사업이 예산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제안자가 집행 및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제안된 사업이 실제 예산으로 편성되는 과정까지의 절차는 공식적인 과정으로 잘 구성되어 있음
 - 다만,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예산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서에 제안 내용에 따라 사업의 추진 내용이 구체적·실질적으로 모니터링 되는지, 주민이 사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집행과정 및 집행 후 결산 과정에 제안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구성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재정민주주의의 취지를 적극 달성 가능
 - 구체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주민설명회 실시, 주민 명예 감독관, 주민 제안 감리제 등의 도입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결산서 작성 과정과 완성된 결산서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결산 검사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실무적으로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제안자 및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성과평가 토론회를 통해 차년도 사업 및 제도 개선에 활용 가능

참고문헌

- 곽채기. (2003).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 NGO의 역할.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23(2), 123-158.
- 곽채기. (2011).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 사례와 발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44, 43-92.
- 나중식. (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브라질-미국-한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9, 134-159.
- 대구광역시. (2019).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책: 시민과 함께 걸은 4년] 참여를 넘어 자치로(2015-2018).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대구광역시, 1-181.
- 류영아. (201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입법·정책보고서 제27호, 국회입법조사처, 1-74.
- 박광우. (200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관한 연구", 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2.
- 민현정. (2018). 시민참여예산제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광주전남연구원.
- 서정섭, 김성찬, 윤태섭, 홍근석, 곽채기. (201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132.
- 서정섭, 이장욱. (2018).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208.
- 윤태환. (2010).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애. (2018).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연구원, 2018, 1-92.
- 임성일, 서정섭, 윤성일, 김미나. (2019).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수탁용역과제.
- 인천광역시. (2021).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예산담당관실: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2022).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예산담당관실: 인천광역시.
- 임성일, 서정섭. (2015).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1-159.
- 임성일, 송창석, 최인욱, 김상철. (2018). 참여예산 : 시민이 정부를 바꾼다. 해남.
- 황소하, 정혜수, 류란희. (2015).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